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2
----------	------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 허종식 · 여기구 · 김정호
박성준 · 이재관 · 유동수
김교홍 · 노종면 · 이훈기
주철현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

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구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해상풍력발전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6.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정보·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9. “풍황(風況)”이란 특정 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주풍향·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10.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 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진흥, 투자유치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수산업 기타 해양의 다양한 개발 및 이용, 해양 환경 보전 및 해양 안전 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결정·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협의·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비지구·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

이용, 과학·기술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기술 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추진단 등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과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0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해상교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4.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 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이하 “허가지역”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지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예비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지구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의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예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환경성·해양교통안전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
6.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안 또는 기본설계 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

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설계안 수립 시 해상풍력 부품 조립 및 설치선박 활용을 위한 배후항만 조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확정·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예비지구 지정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이 공고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해관계자등”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참여대상 주민 및 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의 투자규모·수익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4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

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관협의회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및 공동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

2. 발전지구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를 말한다)의 건설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동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다

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인·허가 등

제19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풍황계측기 매수협약이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해제·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

분에 관한 협의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0.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9.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2.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2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3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착공 신고)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풍황 계측기의 이용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사업)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인가등을 할 때에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3.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입지 적정성 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상풍력발전산업 기반 조성 등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항만시설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2.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9조에 따른 추진단 및 지원단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의 파견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기본설계 및 개발실시계획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

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
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
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6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0조에
서 정하는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2조제2항에서 정
하는 인·허가등 절차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중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

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